

금융회사의 대출쏠림 억제방안

지 동 현 (상임자문위원, 3705-6191)

대출쏠림을 특정 시기에 특정 부문에 대출이 집중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면, 우리나라 대출시장에 나타난 쏠림현상은 2001~2002년 개인신용대출, 2003~2004년 중소기업대출, 2005~2006년 주택담보대출로 요약된다. 대출쏠림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융회사는 대출고객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생산, 경기역행적 리스크허용한도방식의 도입, 고객가치를 최우선시하는 경영관리방식의 채택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감독당국은 채무자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대출쏠림을 억제하는 정책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의회 청문회에 불려 나온 씨티그룹 전회장 척 프린스는 “음악이 흐르는 한 춤을 멈출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 선진 우량 금융회사로 인정받아온 씨티그룹의 CEO가 씨티그룹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쏠림현상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발언을 한 것이다. 금융시장에서의 쏠림현상은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주가, 금리, 환율의 변동성을 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쏠림현상에 의한 주가, 금리 및 환율 변동성의 확대는 경제주체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어려움을 준다. 한편 예금시장, 펀드시장 그리고 대출시장에서도 쏠림현상이 이따금 발생하는데, 본고에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대출시장에서의 쏠림현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대출쏠림 현상과 원인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 매년 4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인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2005년 말 300조원에 달해 299조원 규모인 기업대출을 상회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예금은행 대출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가계대출의 급증이다. 1996년말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51조원으로 기업대출의 41%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 매년 4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인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2005년말 300조원에 달해 299조원 규모인 기업대출을 상회했다. 특히 적정한 리스크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남발로 인해 급증한 개인신용대출은 2003년에 카드사태를 초래하였다.

예금은행 중소기업대출은 2002~2003년 기간에 연평균 28% 급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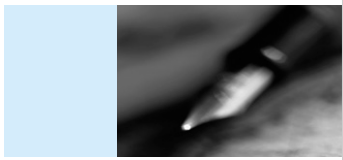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2002~2003년 기간에 연평균 28% 급증했다. 여신심사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급증한 중소기업대출은 연체율이 높아지자 2004~2005년 기간에는 대출증가율이 잠시 낮아졌다. 그러나 M&A를 통한 외부성장 기회가 부족하여 내부성장에 치중한 국내은행들은 중소기업대출을 또다시 크게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06~2007년 기간에 신규 취급된 원화대출금에서 중소기업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2% 수준까지 올라갔으며, 그 당시 취급된 중소기업대출은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집중되었다.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은 2007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두 자리수 증가율을 보여 2009년말 기준 264조원에 달했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2007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두 자리수 증가율을 보여 2009년말 기준 264조원에 달했다. LTV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2006년 DTI 규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계속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였고, 그 결과 주택가격도 2006년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같은 개인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 주택담보대출의쏠림 현상은 대기업대출에 편중된 대출 포트폴리오로 인해 1997년 외환위기에 빠진 국내은행들이 그 이후 대기업대출 대신 개인대출 및 중소기업대출을 집중적으로 증가시켜온 결과이다. 즉, 그 당시 대기업대출쏠림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의도와는 달리 그 이후에 개인대출 및 중소기업대출쏠림을 유발시키게 되었다.

이처럼 국내은행의 대출쏠림이 고객군을 달리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은 국내은행이 대출고객의 부채상환능력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데에 있다. 기업



고객의 채무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은행은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초로 하여 기업의 재무적 분석과 경영진의 경영능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국내은행에는 산업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개인대출심사와 관련한 통계분석가도 크게 부족하다. 산업전문가와 통계분석가를 충분히 보유하지 못해 차입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국내은행들은 담보위주의 심사 혹은 타 은행 따라하기 등의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대출쏠림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은행들은 담보위주의 심사 혹은 타 은행 따라하기 등의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대출쏠림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금융회사의 대출쏠림 억제방안

금융회사 차원에서 대출쏠림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지배구조의 확립, 추가적인 대출을 억제하는 대출약정서의 체결, 경기역행적 리스크허용수준제도, 대출계수를 제외한 KPI제도의 채택, 상환능력위주의 대출승인제도 강화 등의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금융회사가 기업고객과 개인고객의 원리금상환능력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업전문가와 통계분석가를 충분히 보유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전문인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임기를 늘리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임을 위해 은행장 3년차에 대출을 대폭 증가시키는 경향을 일컫는 '3년차 은행장 증후군' 이 지배구조가 불안정한 은행일수록 뚜렷하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은행장 임기를 길게 가져가면 대출쏠림을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년차 은행장 증후군' 이 지배구조가 불안정한 은행일수록 뚜렷하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은행장 임기를 길게 가져가면 대출쏠림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별 금융회사가 특정 차입자에게 상환가능한 범위내에서 대출을 해준 경우라도 경쟁 금융회사가 추가적인 대출을 해주면 차입자는 과다채무로 인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즉, 대출시장에는 외부효과가 존재한다. 대출시장의 외부효과로 인한 부실화 차단장치로 금융회사는 대출만기전에 차입자가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추가적인 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대출의 상환을 강제하는 대출약정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는 대출만기 전에 차입자가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추가적인 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대출의 상환을 강제하는 대출약정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경기가 좋을 때 리스크허용수준을 낮추어 보수적으로 대출을 하고, 대신에 경기가 나쁠 때 리스크허용수준을 높여서 공격적으로 대출을 늘리면 대출 쏠림은 억제될 것이다.

대출계수를 KPI에서 배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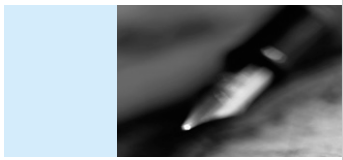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회사는 매년 대출계수 목표를 확정하기 이전에 리스크허용수준을 먼저 결정한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경기호황이 지속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 리스크허용수준을 높여 대출승인기준을 완화한다. 금융회사들이 대출승인기준을 완화하여 대출을 공격적으로 하면 대출쏠림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동태적 대손충담금제도와 유사하게 경기가 좋을 때 리스크허용수준을 낮추어 보수적으로 대출을 하고, 대신에 경기가 나쁠 때 리스크허용수준을 높여서 공격적으로 대출을 늘리면 대출쏠림은 억제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금융회사의 리스크허용한도를 책정함에 있어서 현행 경기순행적인 방식에서 다소 경기역행적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대출쏠림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성과평가지표인 KPI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상에 나타나는 계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대출금액, 수신금액, 연체대출금액, 대손충담금금액, 수수료 수익, 영업이익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즉, 현행 KPI에는 대출증가액에 몇점이라는 식으로 목표가 주어진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대출증가에 더 높은 KPI를 배정하면 대출쏠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대출계수를 KPI에서 배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원리금상환능력이 부족하고 비주거용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LTV가 50% 수준을 하회하더라도 부실대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현재와 같이 LTV와 병행해서 DTI를 대출승인조건으로 사용하는 것이 담보대출고객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가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DTI 통계 및 투자목적 여부, 전세자금 활용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충실히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급증했지만, 개인대출 연체율은 별로 상승하지 않았다. 극심한 경기침체기에도 개인대출 연체율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2003년 카드사태이후 개인신용정보의 생산 및 공유를 유도한 감독당국의 정책효과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이 금융위기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은 기업신용정보 생산 및 공유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은 기업 심사에 필요한 기업정보를 더욱 충실하게 생산하는 인프라시스템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역사적으로 대출쏠림이 발생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대규모 부실여신이 발생하는 현상이 여러 차례 관찰되었다. 대규모 부실여신은 금융회사를 부실화시켜 금융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한편 수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 경기상승기의 대출쏠림은 자산가격의 버블을 만드는 반면 경기하강기의 신용경색은 버블을 붕괴시킨다. 따라서 대출쏠림은 반드시 억제되어야 한다.

대출시장의 외부효과로 인해 대출쏠림현상은 금융회사를 동반 부실화시킨다. 특정 금융회사가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대출을 해주면 자신은 물론 다른 금융회사를 부실화시키고 대출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금융회사가 대출쏠림현상을 야기시키지 않으려면 대출고객이 대출을 통해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대출고객의 원리금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담보에만 의존하여 원리금상환능력을 초과하여 대출을 하는 금융회사는 약탈적 대출을 하는 금융회사로 시장에서 부정적인 평판을 받을 수 있다. 담보 유무와 상관없이 대출고객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대출을 하는 금융회사가 책임있는 대출을 하는 회사다. 책임있는 대출을 하는 금융회사가 대출고객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장기적으로 대출시장의 경쟁에서 결국 승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KIF**

담보에만 의존하여 원리금상환능력을 초과하여 대출을 하는 금융회사는 약탈적 대출을 하는 금융회사로 시장에서 부정적인 평판을 받을 수 있다.